

2019
Vol. 1
통권 제7호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SEJONG RESEARCH INSTITUTE

2019
Vol. 1



CONTENTS

- 03 세종형 자치경찰제 모델 제언 | 김 흥 주 연구위원
- 07 세종시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입지선정 최적화 | 안 용 준 연구위원
- 12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현황과 가치제고 방안 | 민 경 선 연구위원



I. 제안배경

● 획일화된 국가경찰의 한계

- 획일화된 국가경찰 운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과 서비스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 경찰서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광역적 경찰활동의 한계, 비민주적 경찰조직 운영 등 국가경찰제의 한계 노정

● 현 정부의 대통령 주요 공약과제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및 확대'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및 추진일정을 발표함
 - 기존 「경찰법」 전면 개정해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그 외 2개의 시도 총 5개 지역에 시범 실시 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 담김

● 세종형 자치경찰의 기본모델 마련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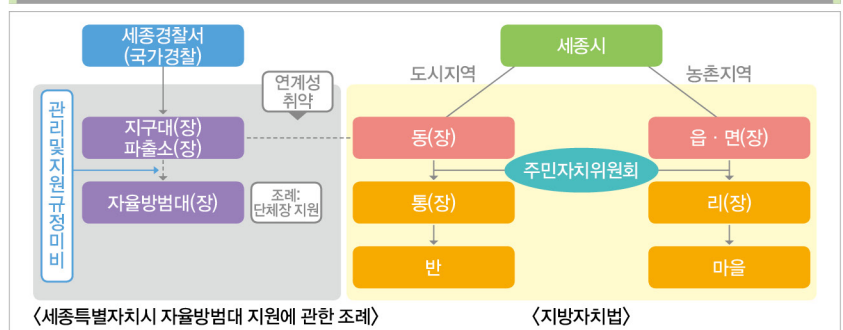
-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세종시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해 세종시가 추구하는 세종형 자치경찰 기본모델(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 제기

II. 세종형 자치경찰제 기본모델 도출

● 국가경찰제 하 지역밀착·민관협력형 치안서비스의 한계

- 국가경찰 중심의 지구대·파출소는 관할 지역의 치안유지, 방법순찰 등 기초치안활동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를 담당함
- 그러나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체계는 일선경찰과 민간(지역주민)이 상호 협력을 통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마을공동체 단위의 자율방범대를 살펴볼 때, 현행 경찰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규정이 미비해 일선경찰의 치안보완인력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 즉,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자율방범대 등을 관리 지원하는 규정 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등과도 연계성이 취약해 주민과 협력적 틀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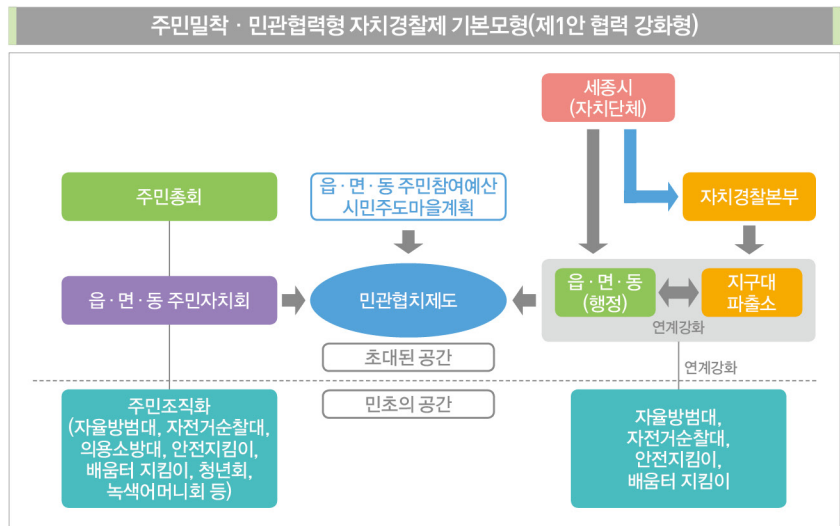
현행 경찰의 주민밀착·민관협력제도의 틀



세종형 자치경찰제 모델 제언

● 주민밀착 민관협력형(지역사회경찰활동) 모형 도출¹⁾

- 연계·협력모형(제1안): 읍·면·동사무소와 지구대·파출소의 연계협력 강화
 - 마을공동체 단위 조직(자율방범대, 자전거 순찰대, 안전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청년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기제 마련,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민관협력의 틀 속에서 마을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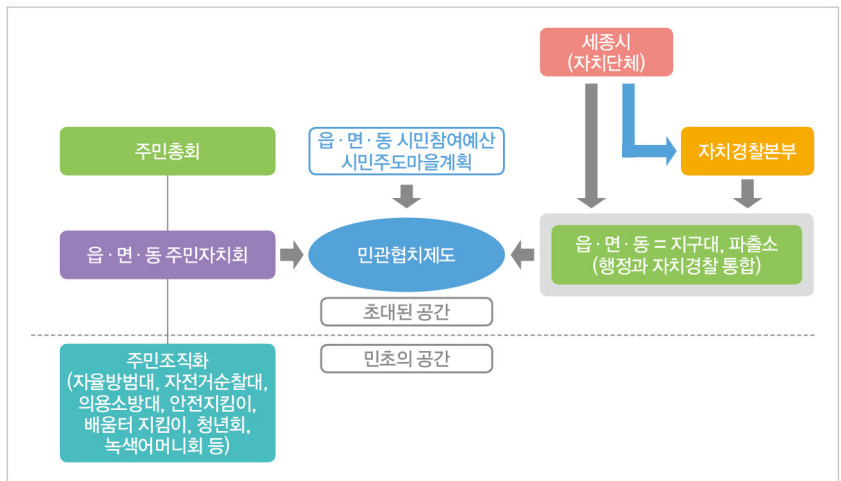


- 통합모형(제2안): 읍·면·동사무소, 지구대·파출소를 통합해 최일선 단위의 종합행정 서비스 운영방안 제시
 - 현행 국가경찰제 하에 파출소·지구대 단위의 일선경찰 체계의 문제는 문서위주 업무 비중, 젊은 인력 기획부서 선호하는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등이 있음
 - 읍·면·동 역시 가정에 방문해 상담 확인하는 특성의 업무가 다수이며 범죄의 노출이 우려되기도 하기에 자치경찰과 사무를 일원화해 민원처리와 출동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외에 재난 재해관련 피해배상접수, 배상확인업무, 재개발·재건축 관련 집단민원, 차량등록,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해 읍·면·동 행정과 자치경찰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가능(단, 통합방식의 현실화는 어려움 존재)

1) 본고에서 제안된 주민밀착 민관협력형, 통합형 자치경찰제 기본모형은 곽현근(2015;2017)의 연구에서 고안되어진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생태계 모형을 토대로 발전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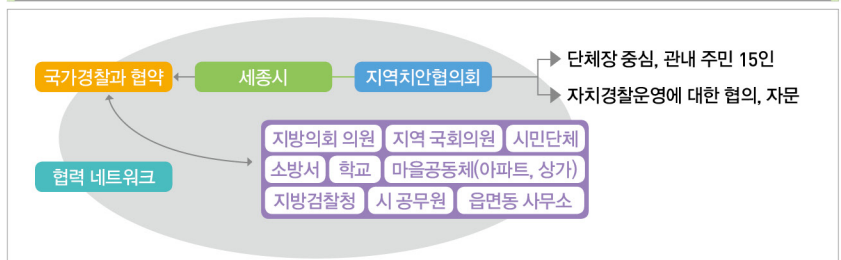
주민밀착 · 민관협력형 자치경찰제 기본모형(제2안 통합형)



● 종합적 검토

- 종합적으로 제1안과 제2안은 각기 읍·면·동 단위에서 생활안전과 관련된 지역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주민이 원하는 곳에 파출소·지구대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능배분을 통해 자율적인 인력배치의 가능성을 열어줌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제1안인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모델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제시됨
- 이와 더불어 지구대·파출소 단위의 자치경찰은 지역여건을 고려, 세부적 역할 및 근무 활동 범위를 조정해 업무의 중첩 및 공백으로 오는 자원 낭비와 책임전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지역주민과 협력적 파트너로서 조정자 역할 해야 할 것이며,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지역 내 자치경찰 중심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임

세종시 지역 내 자치경찰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성



III. 제언

● 자치경찰의 법제화 방향 및 도입기반 논의

-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이 우선, 차선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방식 고려
 - 현행 자치경찰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검토
 -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조직, 인력, 재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 국가경찰과 협약, 시민들에 대한 자치경찰제 인식확립 및 홍보계획 필요

● 지역치안 협의회 활성화 방안, 스마트 치안 강화

- 현재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협의회 관계자의 인식부재 등의 한계에 직면, 이에 마을공동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마을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스마트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 기존의 경찰활동전략(문제중심 경찰활동: Program-oriented policing: POP)에 과학기술 접목해 스마트 치안 기반구축

● 조직 및 치안사무 혼란 최소화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휘체계의 혼선,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그리고 이관된 인력에 대해 직급, 급여, 그리고 부수적으로 배분되는 사무배분의 혼란 등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노력 필요

● 지구대 파출소에 젊은 경찰인력의 수급노력 및 자치경찰 본부의 역할

- 현행 지구대 파출소 경찰은 젊은 인력의 기획부서 차출구조로 고령화 문제
- 우선적으로 20-30대 연령의 자치경찰관을 신규채용 시 지구대·파출소에 우선적 배치 검토와 국가경찰 이관인력에 대해 직무적성성 평가를 통한 재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추가적으로 파출소 및 지구대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배치와 자치경찰 본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임



I. 전기차 및 충전시설 개요

● 전기차 개념 및 유용성

-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을 의미함
-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며 내연기관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수단임.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CO₂ 배출량을 2톤 감축하는 효과를 주며 내연기관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 감소에 도움을 줌. 경제적 측면에도 휘발유차와 비교했을 때 운행비용이 저렴하여 연료비 절감효과가 뛰어나 완속충전의 경우 휘발유차의 10% 수준이며, 급속충전의 경우 휘발유차의 24% 수준으로 연료비가 절감됨

● 전기차 충전시설 개요

-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두가지 타입으로 국제표준(IEC)에는 5가지 급속 충전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중 3가지(차데모, AC3상, 콤보)방식이 급속 충전방식으로 사용되고 완속 충전방식은 5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집중형 충전소, 다중이용 충전소, 소규모 충전소 형태로 다양하게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II. 세종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현황분석

● 세종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 현황

- 세종시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249대로 18년 1월 대비 152%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하게 성장 중임
- 세종시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감면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세종시 공공 전기충전소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총 25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 충전기 개수는 44대이며, 충전기 타입은 DC차데모, AC3상, DC콤보, AC완속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충전소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며 세종호수공원만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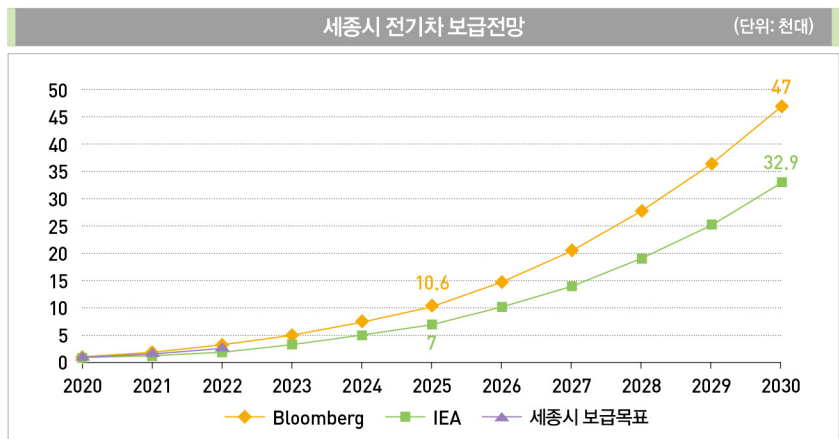
세종시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입지선정 최적화



III. 세종시 전기차 보급전망 및 충전시설 수요예측

● 세종시 전기차 보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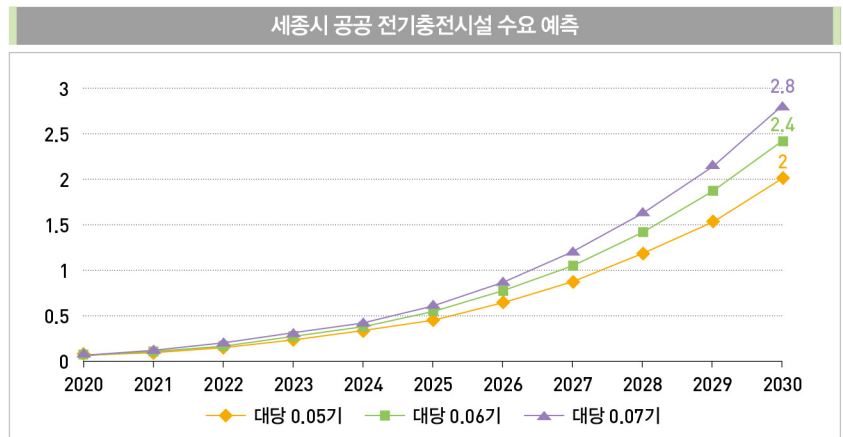
- 중앙정부에서는 전기차를 2022년까지 35만대를 보급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Bloomberg 및 IEA는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PHEV 포함)이 20%~28%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앙정부 보급목표대로 보급계획이 시행된다면, 2022년에 세종시는 약 3,1천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세종시에 Bloomberg 예측값 적용하여 산정 시 47.0천 대, IEA의 예측값을 적용 시에는 32.9천 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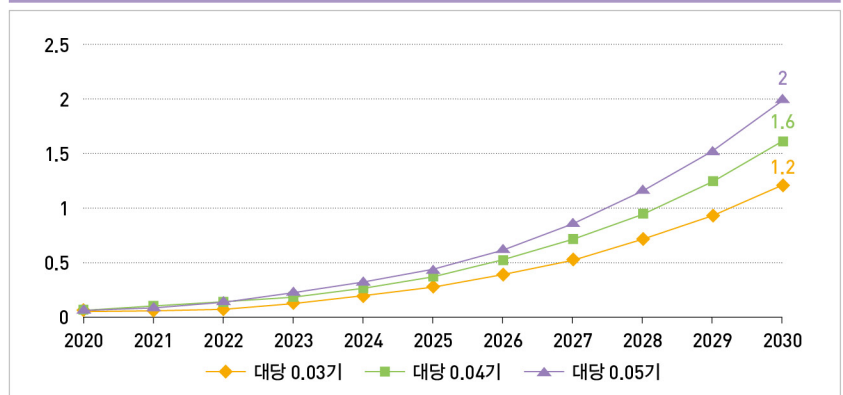
● 세종시 공공 충전시설 수요 예측

- 본 연구에서는 공용충전기 시설 수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봄
 -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당 0.05기, 0.06기, 0.07기 시나리오별로 분석
 - 공용 급속충전기는 전기차당 0.03기, 0.04기, 0.05기 시나리오별로 분석
- (*참조 : 비공용 충전기 수요는 전기차 1대당 평균 1.1기로 전망)
- 2030년에 세종시 공용 완속충전기 수요는 2.0천기에서 2.8천기가 필요하며, 공용 급속 충전기 수요는 1.2천기에서 2.0천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A : 공용 완속충전기 수요예측

(단위: 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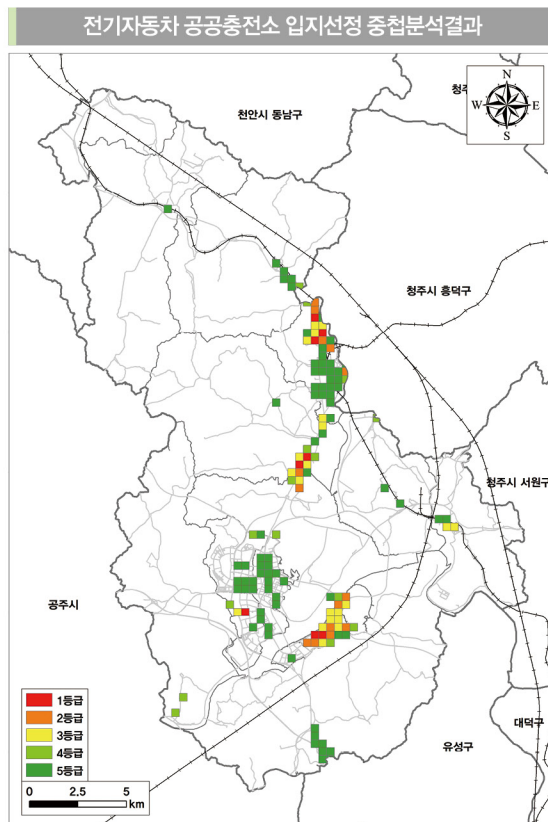
B : 공용 급속충전기 수요예측

(단위: 천기)

세종시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입지선정 최적화

IV. 세종시 전기 — 충전시설 최적입지선정

- 세종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선정방안을 도출함
 - 읍면동별 자동차 등록대수(전기차의 보급대수는 일반차량대비 일정비율 전제)
 - 세종시 전기차 보급실적(전기차 구매자의 거주지)
 - 현재 설치된 전기충전소 위치(중첩분석시 네거티브값으로 적용)
 - 세종시민의 OD(출발지-목적지)(차량이용자들의 OD밀도맵)
 - 차량 주요이동 동선(주요 이동도로)
- 셀 등급별 값에 따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공공전기충전소 설치가 필요한 입지에 대해서 1~5등급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조치원읍에 위치하고 있는 흥익대학교 인근지역, 조치원 공업단지, 행복도시 3-2생활권과 2-1생활권 일대가 1등급, 부강면 일대는 2등급으로 선정되었음





V.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세종시가 현재 건설중이므로 구체적인 입지보다는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입지선정방법론에 집중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 세종시에 공공 전기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경우 권장되는 지역을 제안함
- 전기차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구입시 인센티브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는 운행단계의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통행료 면제, 주차무료, 버스차선 운행가능, 전기차 운행 우선지역 설정 등
-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뿐 아니라 상용차량의 전기차 전환계획이 필요하며, 통학 버스, 택배차량, 택시 등을 전기차로 전환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내에서 운영중인 공공충전기 현장실태조사결과, 개선해야할 부분이 필요함. 대부분의 전기충전기가 환경부 또는 한전에서 운영 중이지만, 세종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방안수립이 필요함
- 전기차 및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양적 보급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나, 향후에는 점차 충전 편의성을 위한 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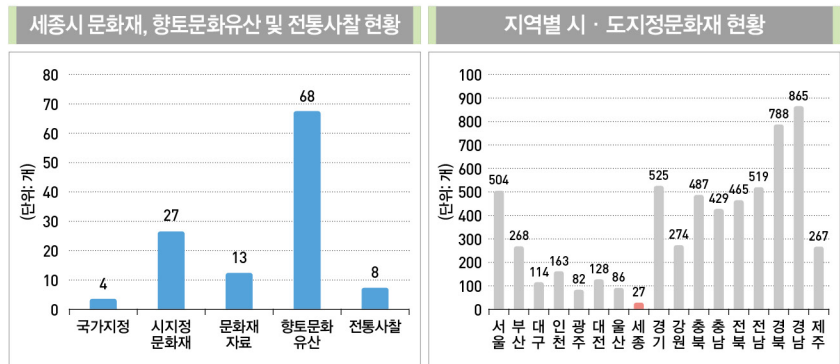
I. 제안배경

-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산재된 관내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타 광역 시·도와 비교해 세종시가 보유한 문화재 건수는 상당히 적어서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과 관리가 요구됨
- 이에 세종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현황

역사문화유산 현황

- 2018년 4월 기준으로, 세종시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 시지정문화재 27건, 문화재자료 13건, 향토문화유산 68건, 전통사찰 8개소를 보유함
- 세종시는 타 광역 시·도와 비교해 지정문화재 수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함
- 보유 문화재 수로 지역 문화자산의 가치를 가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세종시의 지정문화재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만큼, 가치 높은 역사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적인 체계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현황(2018.4)」.

자료: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 역사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현황

- 세종시는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 환경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수립함
- 주요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은 크게 ①문화재 관리, ②국가지정문화재 정비, ③시지정 문화재 정비, ④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시설물 정비로 구분됨
- 이에 문화재 정비 쪽에 많은 정책사업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III.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 방안 제시

● 정책 추진방향

- “역사문화유산 활용으로 세종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①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의 전문화, ②역사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기회 확대, ③역사문화유산 활용 다각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수립함
-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4개 영역(관리·보존, 발굴·지정, 연구·교육, 활용·향유)에서의 추진전략을 제안하였음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	
구 분	내 용
기본방향	역사문화유산 활용으로 세종시 브랜드 가치 향상
목 표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의 전문화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기회 확대
	역사문화유산 활용 다각화
추진전략	(관리·보존)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 전문화
	(발굴·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연구·교육) 역사문화유산 연구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활용·향유) 다각적인 역사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 추진전략별 과제

-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를 4대 추진전략별로 구분해 제안하였음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체계 구축과 다각적인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제시한 과제의 추진시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 추진할 것을 제안함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현황과 가치제고 방안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과제 및 추진단계 제안				
분 야	주요 제안사업	추진단계		
		단기	중기	장기
관리·보존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 확대 배치			
	문화재 담당 조직을 주요업무 단위로 세분화			
	문화재 분야 법정 계획 고도화			
	문화재 유형별 관리·보존 방안 마련			
	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관리·보존 현황 파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보존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발굴·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연구·교육	대상별 역사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공무원 대상 역사문화유산 교육 확대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 운영			
활용·향유	역사문화유산 지도 제작			
	역사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엮은 역사문화유산 홍보			
	역사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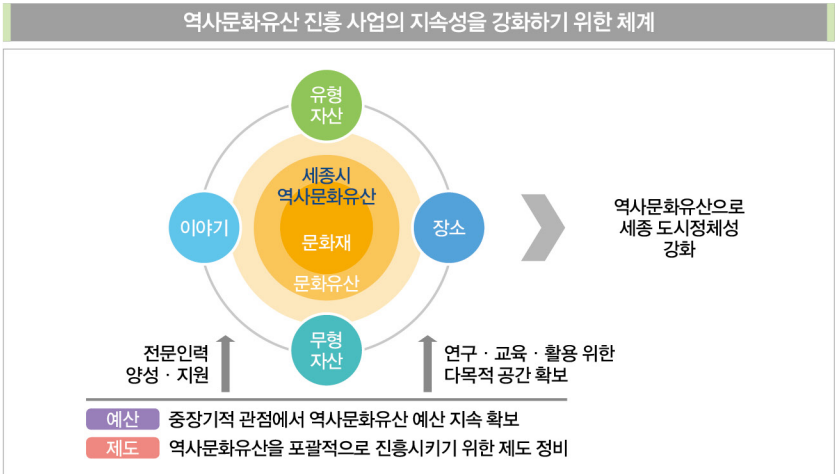
IV. 정책제언

●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담당 조직 확대와 정책 전문성 제고

- 문화재 업무의 유형을 큰 틀에서 구분해 업무 특성에 따라 팀을 구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에 배치할 것을 제안함
- 정책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시 문화재 업무 담당조직의 정비와 인력 충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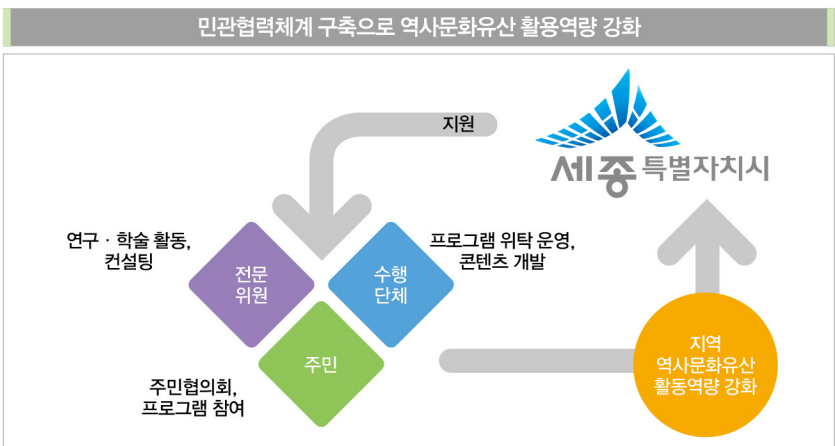
● 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역 역사문화유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계획해야 함
- 그리고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유산의 폭을 확대하여 건강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역사문화유산의 활용·진흥을 실현 가능하게 할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 전문 인력 및 공간의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는 세종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활용 역량 강화

-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이 특색을 나타내면서도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활용 사업 운영단체 대상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세종시'-'문화재 활용 사업 수행단체'-'전문가(문화재 전문위원)'-'주민(가칭 '역사 문화유산 주민협의회')'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함
- 적극적으로 이들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활용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http://www.dsi.re.kr>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Tel. (042) 530-3500 Fax. (042) 530-3528

발행인. 박재묵 편집인. 이수진 등록일. 2017. 10. 30.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8